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인천광역시장 후보에게 드리는

인천 경제

이렇게 가꾸어 주십시오

인천상공회의소 인천경제단체협의회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제안 추진 경과

Progress on
Policy Recommendations

인천 상공회의소

2010 민선5기 지방자치단체장 공약을 위한 인천경제 10대 현안 과제

2012 제19대 총선 및 18대 대선 공약을 위한 인천경제 주요 현안 과제

2014 민선6기 지방자치단체장 공약을 위한 인천경제 주요 현안 과제

2016 제20대 총선 공약을 위한 인천경제 주요 현안 과제

인천 상공회의소

2017 인천경제주권 어젠다

2018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인천광역시장 후보에게 드리는 「인천경제 이렇게 가꾸어 주십시오」

2020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인천지역 후보께 드리는 인천경제 희망 제안

2021 2021 인천경제주권 어젠다

2022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인천광역시장 후보에게 드리는 「인천경제 이렇게 가꾸어 주십시오」

2024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인천지역 후보에게 드리는 인천경제 희망 제안

인천 상공회의소

인천 경제단체 협의회

2025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에 바라는 2025 인천경제주권 어젠다

2026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인천광역시장 후보에게 드리는 「인천경제 이렇게 가꾸어 주십시오」

인천 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

인천 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

제언을 드리며

Message

인천상공회의소와 인천경제단체협의회,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인천의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과 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하여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인천광역시장 후보자께 제언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기업들은 현장에서 치열한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관세 부과, 중동 사태 등 예측할 수 없는 대외 환경뿐만 아니라
AI 확산, 탄소중립 대응 등 경영패러다임도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어,
기업은 생존과 혁신을 함께 고민해야하는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인천은 전통제조업과 첨단산업이 공존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을 이끌 잠재력을 지닌 도시입니다.
인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는
경제성장의 엔진인 기업이 힘껏 뛸 수 있는 기반을
더욱 튼튼히 다져야 할 것입니다.
기업의 혁신과 도전이 지역경제 성장으로 이어지고,
그 성과가 시민의 삶에 온전히 돌아갈 수 있도록
인천의 미래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번 '인천경제 이렇게 가꾸어 주십시오' 정책 제안에는
인천 경제계, 시민사회가 함께 고민하여
인천 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지역경제의 과제와 제안을 담았습니다.

모든 후보께서 제안에 귀 기울여 주시고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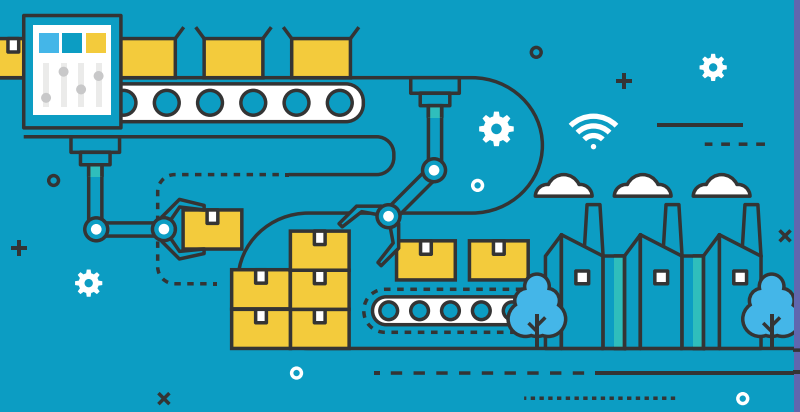
인천상공회의소 회장·인천경제단체협의회 상임대표 박주봉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김재식·김연옥·신병철·이종일

4대 목표 12대 대표과제

1 기업이 성장하는 인천

2 미래 산업을 선도하는 인천

3 탄탄한 산업 인프라가 함께하는 인천



4 글로벌 중심도시 인천

기업이 성장하는 인천

인천 동구 철강산업
산업·고용 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통상리스크 대응을 위한
기업 지원 확대

전통 제조업의
재도약을 위한 지원 강화

미래 산업을 선도하는 인천

인천 바이오
국가첨단전략특화단지
국가산업단지 지정

분산에너지활성화특별법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적용에 따른 인천 역차별 해소

항공정비산업
육성을 위한
지역 내 공급망 구축

탄탄한 산업 인프라가 함께하는 인천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 조기 완공

산업용지
확충

안정적인 전력 공급
인프라 확보

글로벌 중심도시 인천

수도권 규제
전면 개정

인천 특성에 맞는
공공기관 인천 존치

강화남단 경제자유구역
신규 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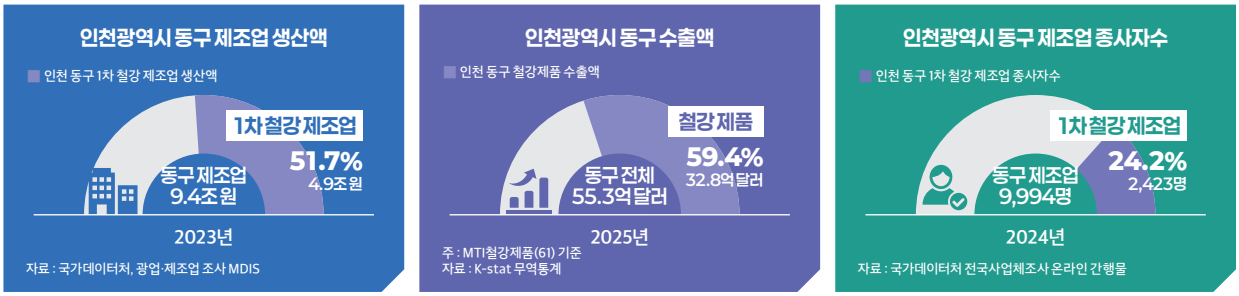
1 기업이 성장하는 인천

대표과제 1

인천 동구 철강산업 산업·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현황 및 문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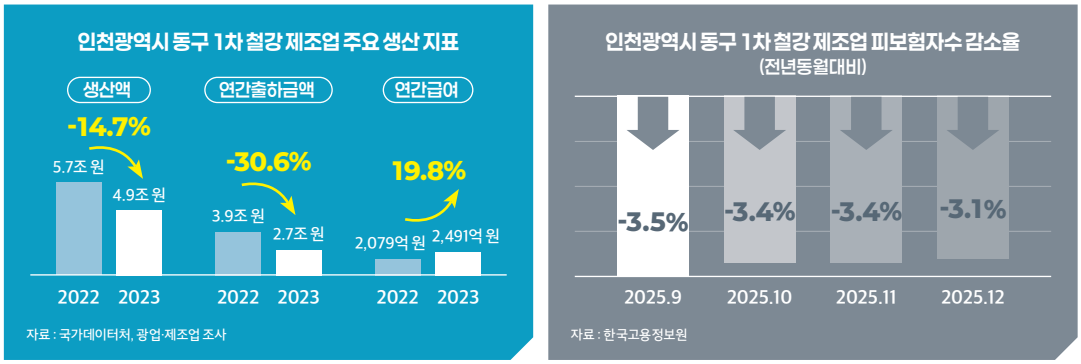
• 인천 동구의 주력 산업인 철강산업 •



대한민국의 철강산업을 이끄는 현대제철, 동국제강 대형 제강사 입지

광양·포항·당진에 이은 수도권 최대의 철강 생산 거점

• 인천 철강산업의 위기 •



최근 건설경기 악화, 중국산 철강재 공급 과잉, 미국 관세 50% 부과, 산업용 전기료 인상이라는 4중고로 대형 제강사들의 영업이익은 '22년 대비 '25년 기준 무려 90% 이상 급감하며 경영난 심화

인천 철강산업은 지역산업구조 특성상 대기업 중심의 수직 계열화와 고용 집중에 따라 대표 철강기업의 매출 하락, 생산 축소, 셧다운이 중소 협력업체 발주액 및 영업이익 감소로 이어지는 연쇄 위기와 고용 불안을 야기

또한, 건설, 기계 등 전후방 산업까지 지역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쳐 동반 침체로 이어질 우려가 커 대응이 시급함

제 안

인천 경제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 온 철강기업들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인천 동구를 산업 및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조속히 지정

대표과제 2

통상리스크 대응을 위한 기업 지원 확대

현황 및 문제점

인천은 대외의존도가 높아 지역경제에서 수출입이 중요한 역할을 함

인천지역 수출은 2005년 130억 달러에서 2025년 602억 달러로 크게 증가.

인천지역 수출이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4.6%에서 8.5%로 3.9%p 늘어나 수출이 활발한 것을 알 수 있음. 또한, 인천지역 수출은 중국, 미국을 중심으로 수출국 집중도가 높아 경기변동에 크게 영향을 받음

그러나 최근 국가 핵심 기술의 중요성 증대 등으로 인해 보호무역주의가 지속·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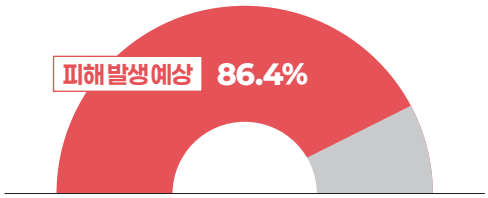
미국의 관세 부과, 미국-이란 전쟁 등 예측하기 어려운 대외 경영상황 지속

- 철강·자동차 등 인천을 대표하는 주력 산업들이 주요 관세 부과 품목에 포함되어 가격경쟁력 하락, 수주 급감 등의 애로 발생
- 중동 사태 장기화로 원자재·에너지 비용 상승, 환율 상승에 따른 수입비용 증가, 운임상승, 물류차질 등으로 우리 기업들의 채산성 저하가 심각하게 우려

그러나 우리 기업들은 대응책 마련이 어려움.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포괄적이어서 실제 품목별, 세번별 구체적인 관세 적용 여부나 대응 방안을 파악하기 어려우며, 수출 시 요구되는 증빙 자료와 서류가 복잡해져 중소기업 인력으로는 이에 대응하기가 불가능함

중동사태 장기화 시, 인천 기업 피해 발생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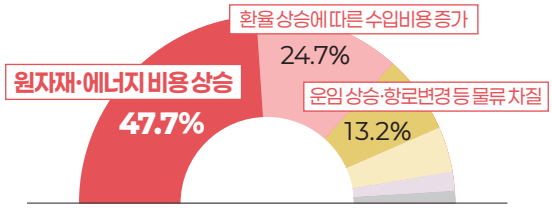
n=199



자료 : 인천상공회의소, '26년 2/4분기 제조업경기전망조사('26.3)

중동사태 장기화 시, 가장 크게 예상되는 피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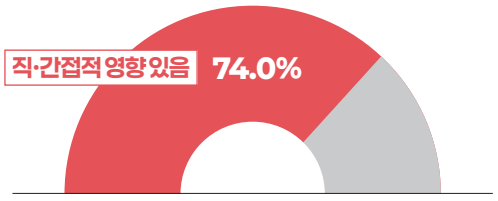
n=174



자료 : 인천상공회의소, '26년 2/4분기 제조업경기전망조사('26.3)

트럼프 관세정책으로 인한 인천지역 기업 영향

n=1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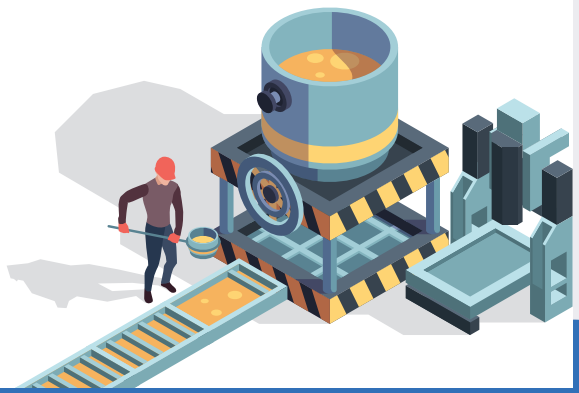


자료 : 인천상공회의소, 트럼프2기 행정부 관세조치가 인천지역 기업에 미치는 영향('25.4)

제 안

수출입 관련 애로를 겪는 기업 대상 지원 확대

- 저금리 대출, 보증 확대, 세제 혜택 등 직접적인 금융 지원
-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상쇄할 수 있는 수입 보조금이나 물류비 등 지원
- 매출 하락에도 숙련 인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고용 유지지원금 및 인건비 지원



대표과제 3

전통 제조업의 재도약을 위한 지원 강화

현황 및 문제점

인천은 제조업 발전과 함께 경제 성장을 이뤄낸 도시

- 인천지역은 2024년 기준 지역내총생산(GRDP) 총부가가치 중 제조업이 가장 큰 비중(28.2%)을 차지하고 있을만큼 제조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큼
- 2024년 기준[1] 인천지역 제조업체 수는 29,156개, 종사자수는 242,091명, 매출액은 125조 1,418억 원으로, 종사자 수는 전체 종사자의 19.0%, 매출액은 전체 매출액의 32.7%를 차지함.[2] 따라서, 지역경제와 제조업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1) 2024년 잠정치 2) 자료 : 국가데이터처(KOSIS), 전국사업체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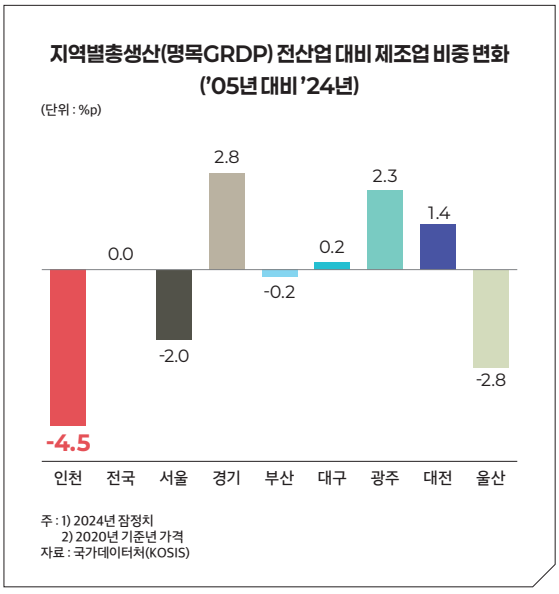
그러나, 인천의 주력산업인 제조업 경쟁력 약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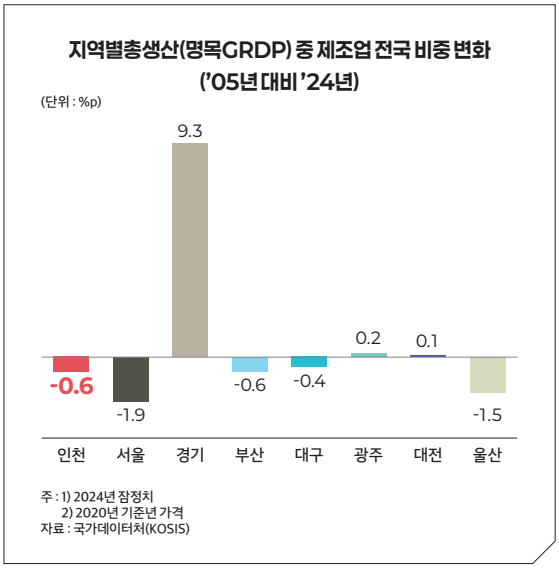
▸ 인천지역 내 제조업 비중 하락

- 지역내총생산(명목GRDP) 기준 인천지역의 전 산업 대비 제조업 비중은 2005년 32.7%에서 2024년 28.2%로 4.5%p 하락. 전국평균뿐만 아니라 타지역보다 제조업 비중이 크게 감소

▸ 인천지역 제조업 전국 비중 감소

- 지역내총생산(명목GRDP) 기준 인천지역 제조업이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 5.4%에서 2024년 4.8% 으로 0.6%p 하락
- 특히, 인천지역 제조업 중 플라스틱, 금속, 기계제조업 등은 산단을 중심으로 집적된 전통 제조업종으로서 2000년대 초반까지 인천시 경제성장을 이끌었으나 노후화, 영세화, 인력난 등으로 인해 점차 경쟁력 하락
- 최근 자동차·반도체 등 전방산업이 대외환경 변화에 따른 불확실성에 노출되며 전통 제조업체들의 불안감 증대





제 안

전통 제조업의 고도화와 생산성 제고를 위한 지원 강화

- 내수 부진을 극복할 수 있는 판로 개척 지원
- 제조업의 AI 도입을 위한 인력·설비·시스템 운영·관리 지원
- 신사업발굴 및 사업 전환 지원

❶ 기업이 성장하는 인천 우선실천과제

1 기업 활력 진작

- 지자체·공공기관 발주 공사 지역업체 참여율 제고 및 지역상품 우선구매 확대
- 해외수출 등을 위한 인증 취득·유지관리 지원
- 인천지역 소상공인지원센터 확충
- 기업 R&D 역량 강화와 국가R&D사업 유치를 위한 컨트롤타워 마련

2 기업 인력난 해소

- 중소기업 근로환경 개선 지원
- 해외전문인력 유치 및 근속 지원
- 중소기업 장기근속자를 위한 복지 지원
- 고령인력 고용 지원
- 외국인력 고용 제도에 대한 지자체 권한 확대

3 산업구조 전환 대응

- 뿌리기업 AI 도입 위한 훈련센터 설립
- 자동차 부품 기업 사업 전환 지원
- ESG 경영 인센티브 지원 체계 마련
- 신사업 진출 지원을 위한 오픈이노베이션 생태계 구축

2 미래 산업을 선도하는 인천

대표과제 1

인천 바이오 국가첨단전략특화단지 국가산업단지 지정

현황 및 문제점

인천 바이오산업은 '24년 기준 생산 규모 7조 6,968억 원, 투자 규모 2조 8,872억 원, 인력은 8,740명*으로 지역 경제의 미래 성장 동력. 지난 '24년 6월 인천은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로 선정되어 우리나라 바이오 산업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

*자료 : 한국바이오협회, 2025년 국내바이오산업실태조사('25. 11)

인천시에서는
세계 1위 바이오 메가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기존 바이오산업 중심지인 송도와 함께
영종도 유보지는 바이오 글로벌 생산·협력
거점으로 조성하고, 남동산단은
바이오 소부장 핵심지역으로 개발하고자 함

세부적으로는 영종 신규단지 조성, K-바이오 랩허브 등 인프라 조성, 첨단신약·의료기기 개발 등 R&D 지원, 바이오 인력양성센터 구축, 원부자재 국산화 추진 등의 계획 수립

그러나, 특화단지 지정만으로는 기반 시설 구축에 한계가 있고, 유수의 바이오 기업을 유치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되어야 정부 예산이 본격적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바이오 기업 유치와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국가산업단지 지정이 필수

또한,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되지 않을 경우 수도권 공업지역 총량규제 때문에 개발 규모가 축소될 것으로 우려되며, 공업지역 내에서만 기업을 유치해야해 현실적으로 산업 집적화가 불가능한 상황임

'23년 경기도 용인은 반도체 특화단지로 선정되고, 국가산단으로 지정된 바 있으나, 인천은 지역균형발전을 이유로 수도권 역차별을 받아 국가산단으로 지정받지 못하고 있음

제 안

첨단산업인 바이오산업의 경쟁력은
국가경쟁력으로 직결되기 때문에
인천의 바이오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우위를 선점할 수 있도록
영종 바이오특화단지
국가산업단지 지정 적극 지원

대표과제 2

분산에너지활성화특별법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적용에 따른 인천 역차별 해소

현황 및 문제점

장거리 송전 기반 중앙집중형 전력체계의 문제점을 보완, 수요지 인근 전력 생산 소비 가능한 지산지소형 분산에너지 시스템 구축 촉진을 위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제정 및 시행('24. 6)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따라 지역별 송전, 배전 비용을 고려하여 전기요금을 다르게 정할 수 있는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도입 논의. 정부에서는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를 위한 지역 구분을 크게 수도권, 비수도권, 제주로 구분하는 방향 검토 중. 기후에너지환경부 주관으로 제도 수립이 진행되고 있으며, 세부안을 곧 발표할 것으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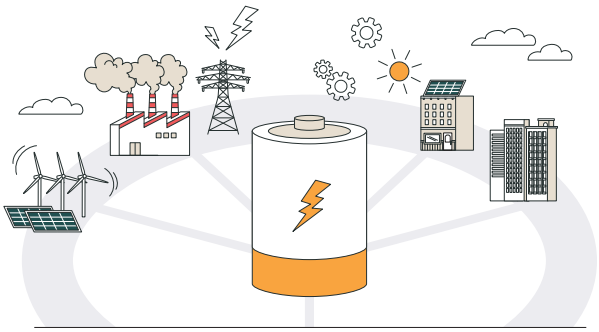
그러나, 권역별로 차등요금을 도입할 경우, 권역 설정 기준이 모호하여 수도권('24년 기준 인천(191.5%), 서울(11.5%), 경기(62%))뿐만 아니라 비수도권 내(부산(169.7%), 경북(228.1%), 충남(207%), 광주(9.5%), 대전(2.9%))에서도 전력자립률의 편차가 크게 나타나 권역 내에서 전력 불균형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과제가 남을 수밖에 없음

인천은 영흥화력발전소 등에서 생산한 전력 대부분을 서울·경기 지역으로 공급하고 있어, 이에 따른 환경 오염 피해, 사회경제적 비용 등을 감수하고 있는 실정

※ 인천 : 발전량의 52% 소비, 48% 수도권 송전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을 수도권, 비수도권으로 구분할 경우, 인천은 수도권으로 포함되어 높은 전력자립률에도 불구하고 전기 요금 상승 우려

이는 수요지 인근에서 전력을 생산하여 소비하도록 하는 법의 취지에도 맞지 않으며, 그동안 수도권 전력공급을 위해 희생을 감수한 인천에 대한 역차별임. 또한, 인천은 생산 공정에서 전력수요가 높은 철강, 석유화학, 자동차, 일반기계 업종 기업들이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다수 위치



하고, 바이오, 반도체 등 첨단기업도 소재하고 있어, 전기요금이 인상될 경우 인천 산업계에 미칠 피해도 클 것으로 우려

제 안

지역 특성이 반영된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수립

- 안정적 전력 공급의 중요성 확대, 신재생에너지 수요 증가 등 지역 산업 특성을 반영한 지자체별 전력 수급 계획 수립이 더욱 중요해짐
- 전체 전력 공급에 기여하는 정도를 객관적으로 나타내는 핵심지표인 전력자립률을 기준으로 시도별 전기요금 차등제 도입 필요. 2024년 기준 전력자립률이 높은 지역은 200%가 넘고 적은 지역은 10% 내외로 편차가 크게 나타나므로 초기에는 인센티브 반영 수준을 조정하여 인상·인하 폭을 작게 설정하고 전력자립률이 낮은 지역에서 분산에너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단계적으로 자립률에 따른 차등 폭을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도입해 지산지소형 분산에너지 구축이라는 법의 취지 달성
- 이처럼 수도권, 비수도권, 제주로 지역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전력자립률, 발전소 입지 여건, 산업 특성, 전력생산 기여도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해 지역별 차등요금제가 수립되고 시행되어 인천 산업계에 미칠 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 건의

대표과제 3

항공정비산업 육성을 위한 지역내 공급망 구축

현황 및 문제점

현재 인천국제공항을 중심으로 항공정비단지(MRO) 조성 중이며, IAI 항공기 개조시설, 아틀라스 중정비센터, 대한항공 엔진정비센터 공장 등 항공MRO시설이 조성되고 있음

2023년 기준 항공MRO 시장의 규모는 전세계적으로 939억 원 달러 규모. 2033년까지 1,253억 달러 수준으로 연평균 2.9% 성장할 것으로 전망. 소형항공기(4.1%)와 중·대형항공기(2.3%) 모두 성장 전망

*자료 : 인천연구원, 항공MRO 단지조성을 위한 인적자원 육성체계 마련('24. 5)

인천에서 추진 중인 사업이 가시화되고, 첨단복합항공단지가 조성되면 MRO 기업 유치와 정비 물량 확대가 기대되고, 향후 항공기 개조뿐만 아니라 기체정비, 엔진정비, 부품정비, 운항정비, 애프터마켓 등 다양한 항공MRO산업 생태계 조성 기대

지역 내에도 이미 경쟁력을 갖춘 항공기 부품 제조기업들이 소재하고 있으며, 산업단지에 집적되어 있는 기계, 전자, 금속 등 제조기업들도 항공기 관련 부품 공급업체로 전환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음

또한, 항공기에 탑재되는 모니터, 좌석, 조명 등 실내 기자재 등 항공산업 전반에 걸친 연계산업과 기존 제조기업들이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임

제 안

항공MRO 산업은 높은 투자비용과 기술 진입장벽으로 새로운 기업의 진입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인천지역 기업들이 공급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

항공MRO산업 공급망이 지역 내 조성되어 인천 제조업이 항공기 정비 부품 등 공급기지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내 항공사와 지역기업 연계방안 마련, 신사업 진출을 위한 기술개발, 인증획득 등 제조기업의 항공MRO 관련 역량 강화 지원

② 미래 산업을 선도하는 인천 우선실천과제

1 바이오헬스 산업

- 바이오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기업 맞춤형 학과(QA, QC 분야) 신설
-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 조기 조성
- 인천 첨단바이오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
- 인천 양자 바이오 융합 클러스터 지정
- 바이오 원부자재 국산화 지원센터 건립
- 산학협력을 통한 바이오 신약 R&D 역량 강화

2 반도체·로봇 산업

- 전력반도체 분야 기업에 대한 기술개발·인력양성 지원
- 산업용 로봇 산업 육성을 위한 구매연계 등 단계별 지원
- 인천로봇랜드 피지컬AI 등 로봇산업 핵심 거점으로 육성

3 항공·방위 산업

- 인천국제공항 중심 공항경제권 구축
- 공항경제권 개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 인천공항 첨단복합항공단지 조기 조성
- 인천공항 5단계 확장사업 추진
- 항공기 부품 제조기업 인증 지원 및 정비 인력 양성
- 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통합 운영 반대
- 인천 방산혁신클러스터 조성
- 드론 산업 생태계 조성

4 탄소중립 대응 위한 에너지 산업

- 인천 해상풍력발전단지 및 배후항만 조기 조성
- 인천지역 내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
- 영흥 석탄화력발전 무탄소 수소 발전 전환
- 영흥 미래에너지파크 내 첨단산업단지 조성
- 수소특화단지 지정 추진
- 신재생에너지산업 관련 인력 양성 및 훈련 인프라 지원

③ 탄탄한 산업 인프라가 함께하는 인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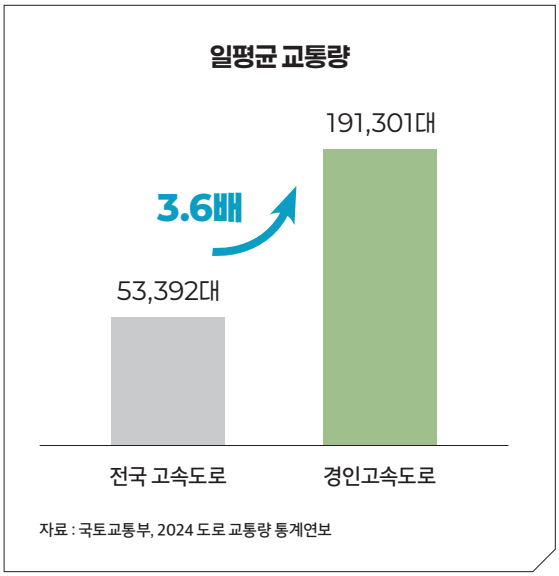
대표과제 1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 조기 완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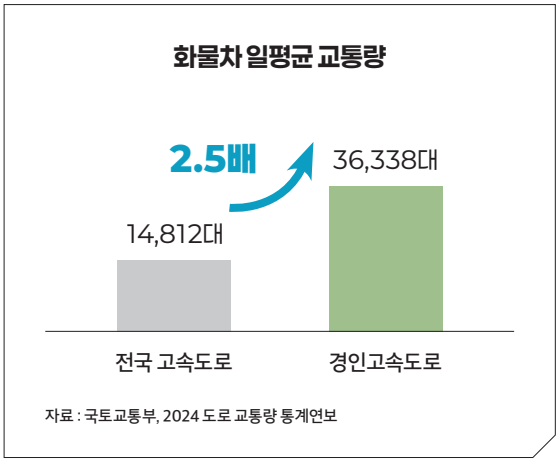
현황 및 문제점

인천과 서울을 잇는 핵심 물류축인 경인고속도로는 1968년 개통 이후 산업화의 동맥역할을 수행

그러나, '24년 기준 일평균 교통량은 191,301대로 전국 고속도로 일평균 교통량(53,392대)의 3.6배, 화물차 통행량도 36,338대로 전국 평균 통행량(14,812대)의 2.5배로 한계에 달함



자료 : 국토교통부, 2024 도로 교통량 통계연보



자료 : 국토교통부, 2024 도로 교통량 통계연보

경인고속도로는 도시 규모가 성장하면서 도심 교통량과 항만을 출입하는 교통량이 함께 증가하며 상습 정체가 발생해 고속도로 본연의 기능 상실

또한, 남북을 연결하는 교차로가 부족해 교통 혼잡 야기, 미흡한 보행로 연결로 생활권 분리와 시가지 단절. 이는 인근 공업지역의 노후화, 인구·일자리 감소 등으로 이어져 원도심 침체 원인으로 작용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을 조기 완공하고, 노후 산업단지 재생 사업을 연계하여 인근 공업지역에 입주한 전통 제조업체들의 고도화, 업종 전환 지원 등이 동반 된다면 산업기능 재생을 통한 원도심 활성화가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

제 안

현재 인하대병원~서인천IC 구간은 1단계(2027년)와 2단계(2031년)로 나누어 추진 중이나, 단절된 인천을 하나로 잇고, 지역 경제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전 구간 조기 완공

타당성 평가 등 행정절차 추진 중인 청라동~신월IC 구간도 국토부와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착공 시기를 최대한 앞당겨 인천의 물류 경쟁력 조기 확보

대표과제 2

산업용지 확충

현황 및 문제점

인천의 경제 규모는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고부가가치 산업과 지식기반 서비스업의 비중은 여전히 낮음

기계·전기전자 등 인천의 주력 업종이 성장 정체에 직면, 8개 산업단지는 조성 20년이 지나 노후화, 영세화되며 산업 구조 변화 속도에 뒤처지고 있음. 또한, 산업단지 입주 업종 제한으로 새로운 기업의 진입과 투자 수요 대응이 제한적으로 인천의 제조업 경쟁력이 점차 약화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기업의 생산 활동 혁신에 큰 역할을 하는 산업단지가 무엇보다 중요. 특히, 인천 지역 기업들은 안정적인 생산 활동과 사업 확장이 가능한 산업단지에 대한 선호도가 높음

그러나, 인천은 타광역시와 비교하였을 때 입주업체 수가 가장 많지만 행정구역 면적 대비 산업단지 지정면적 비중은 2.2%로 지역 규모에 비하여 산업용지 비중이 낮음

'25년 3/4분기 현재 인천 전체 산업단지 중 조성 완료된 10개의 산업단지*는 분양률이 100%로, 기업들의 수요가 많은 것을 알 수 있음. 인천은 공항과 항만 인프라가 있고, 인력 수급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원활하기 때문에 기업들은 인천에서 사업을 유지하기를 원하지만 기업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산업용지는 부족한 상황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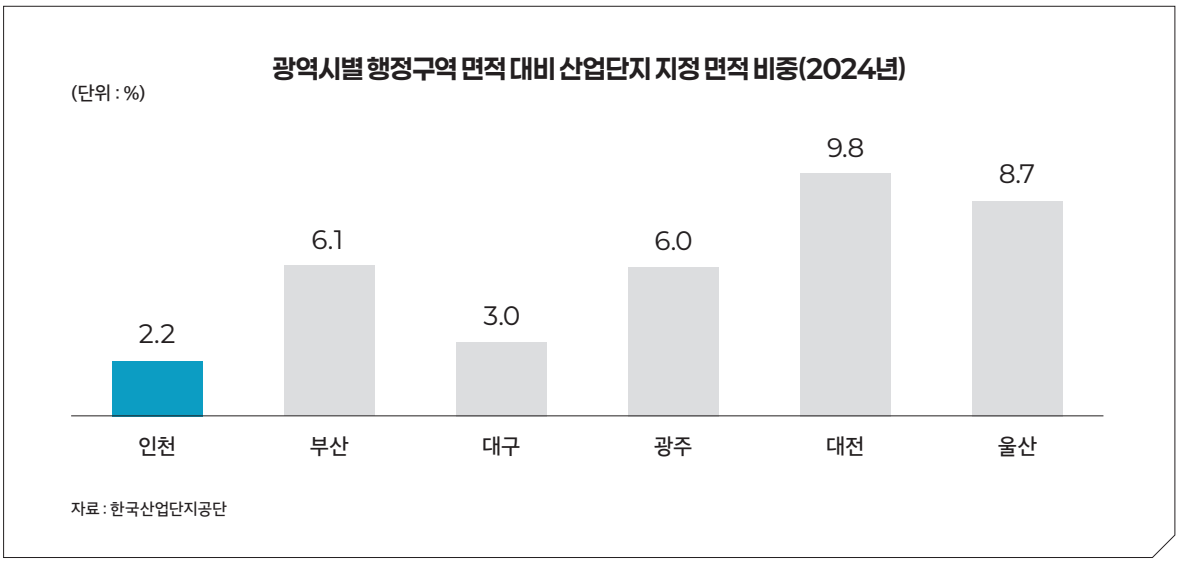
*남동, 부평·주안, 인천기계, 인천, 인천서부, 청라1지구, 강화하점, 강화, 서운, 인천서부자원순환특화

특히, 인천에서 오랫동안 사업을 영위한 기업들은 규모가 커지고 공장 설비 노후화 등으로 추가 부지가 필요하지만, 높은 부지 가격, 산업용지 부족에 따라 신산업 진출과 생산 활동 혁신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제 안

현재 조성 중인 계양테크노밸리, 남촌일반산업단지 등 조속 조성 및 산업 용지 확충

혁신 역량을 갖춘 안정적인 산업용지가 공급된다면 첨단 제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며,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 성장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 인천 내 산업용지 부족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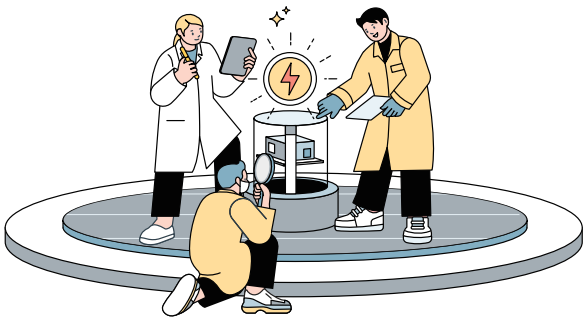


대표과제 3

안정적인 전력 공급 인프라 확보

현황 및 문제점

안정적 전력 공급은 첨단산업 기반 조성의 전제가 되고 있음. 인천의 전력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반도체, 바이오, 석유 등 관련 제조업종의 전력사용량이 증가함. 또한, 기업의 스마트공장 확산, AI 도입 등으로 인해 전력수요는 더욱 급증할 것으로 예상



**전력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지만,
전국 송배전망 확충 지연, 신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등으로 계통 운영의 복잡성도 커지면서 전력공급의 안정성이 점차 저하**

또한, 인천의 전력공급을 담당하고 있는 영흥화력발전소 1·2호기는 2034년 액화천연가스(LNG) 연료로, 3·4호기는 2038년 암모니아 혼소 발전 등 무탄소 연료로 전환, 5·6호기는 발전소 내구연한(30년)에 따라 2044년에 폐쇄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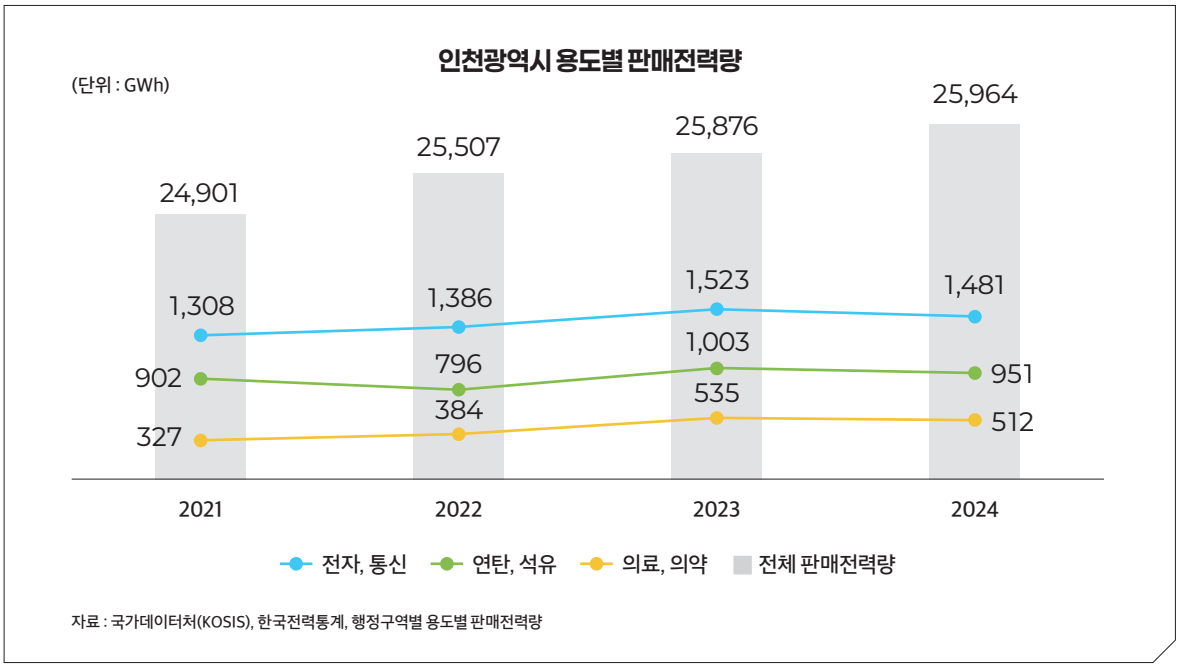
송변전망 구축 사업이 지연되면서 송도 바이오클러스터 내 기업들은 투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산업의 전력의존도는 타산업 대비 8배 높아 전력인프라 확보 없이는 기업 유치도 어려움*

*자료 : 한국경제인협회,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전력수급 애로 개선방안('24. 7)

제 안

인천의 미래성장동력이 되어줄 바이오, 반도체 등 첨단기업 유치,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필수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신송도변전소 적기 구축, 발전소 신설, 해상풍력발전단지 조기 조성 등 전력수급 안정화를 위한 대책 마련



자료 : 국가데이터처(KOSIS), 한국전력통계, 행정구역별 용도별 판매전력량

③ 탄탄한 산업 인프라가 함께하는 인천 우선실천과제

1 인천항 경쟁력 강화

- 인천신항 자유무역지역 확대 지정
- 인천시 항만자치권 확보
- 인천항 계획수심 확보를 위한 제1항로 및 북항 준설
- 인천선박수리조선단지 조성
- 북항 배후부지 입주 업종 확대
- 중고자동차수출 및 애프터마켓 클러스터 조성

2 산업단지 혁신 동력 마련

- 산단 내 AI 디지털 센터 설립
- 체계적인 지방산업단지 관리·운영
- 산업단지 입주기업 노후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 산업단지 입주 업종 규제 완화
- 인천경제자유역과 연계한 기존 산업단지 고도화 및 인공지능 전환(AX) 지원
- 인공지능 전환(AX) 실증산단 구축사업 선정
- 남동국가산업단지 문화선도산단 선정
- 계양테크노밸리 2단계 구역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
- 계양테크노밸리 첨단 기업 유치 및 교통인프라 조성
- 인천서부일반산업단지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

3 교통 인프라 확충

- 경인전철 지하화 조속 추진
- 인천대로 지하화 조속 추진
-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인천~안산 구간 신속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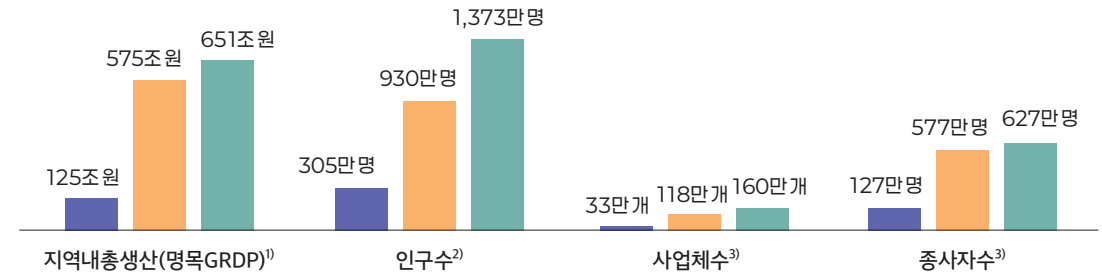
4 글로벌 중심도시 인천

대표과제 1

수도권 규제 전면 개정

현황 및 문제점

인천은 서울, 경기와 같은 수도권으로 분류되나 경제 규모에 있어 큰 차이가 나, 수도권 규제 정책의 전면적 개정 필요



주 : 1) 시도별 경제활동별 지역내총생산(2024년 잠정치)
2) 주민등록인구(2025년)
3) 전국사업체조사(2024년 잠정치)
자료 : 국가데이터처(KOSIS)

국제적으로 도시 간의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수도권 규제정책은 인천은 물론 국가 전체 경쟁력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

세계 주요 대도시인 런던, 파리, 도쿄도 한 때 과도한 대도시 집중 현상을 막기 위해 규제정책을 시행했지만,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수도권 정비계획을 자율적 관리체제로 전환. 우리와 유사한 일본도 2000년대 들어선 이후, 대도시권 각종 개발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대도시권의 성장 촉진

수도권 규제로 인해 산업육성 및 기업지원 관련 역차별이 증가해,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위축시키고, 오히려 지역 간의 격차는 심화되는 부작용 발생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필수적인 고용 증대, 창업에 있어서도 수도권에 소재했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고 있음. 국책사업 선정, 예산지원 시 차별, 공장 입지, 도시개발 제한 등 경제성장 기회를 마련할 수 있는 많은 분야에서 규제를 받고 있음

<대표적인 수도권 규제>

- 500㎡ 이상 공장, 대기업 공장 신·증설 제한
- 일반대학 신설 금지, 증원도 총량으로 규제
- 대규모개발사업 시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필요(도시개발사업(100만㎡ 이상), 공업용지조성사업(30만㎡ 이상) 등)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고용증대기업세액공제 차등 적용
-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차등 적용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차등 적용
- 외국인력(E-9) 규제 완화 시 수도권 기업 제외
  - 비수도권 제조업에 한해서만 추가 고용한도 상향
  - 비수도권 유턴기업에 한해 기업규모 무관하게 외국인 고용 및 외국인 추가고용 상한 삭제

제 안

국가경쟁력이 광역도시권의 경쟁력에 따라 좌우될 수 있어 수도권, 비수도권으로 나누는 것이 아닌 지역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수도권 규제 정책의 전면적 개정

대표과제 2

인천 특성에 맞는 공공기관 인천 존치

현황 및 문제점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중앙정부 산하 공공기관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 재단법인 건설기술교육원, 학교법인한국폴리텍, 한국환경공단, 항공안전기술원, 극지연구소, 국립인천해양박물관* 9개임

*국립인천해양박물관 : 2026년 1월 공공기관으로 신규 지정

2025년도 기준 중앙정부 산하 공공기관(부설기관 포함)은 344개. 인천지역 소재 공공기관 8개는 전체 공공기관의 2.3% 수준.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인천보다 공공기관 소재 비율이 낮은 곳은 광주와 제주특별자치도뿐임. 인천은 인구 대비 공공기관 수도 타지역에 비하여 부족. 인천은 전국 인구의 6.0%를 차지하고 있으나, 공공기관 소재 비중은 2.3%에 불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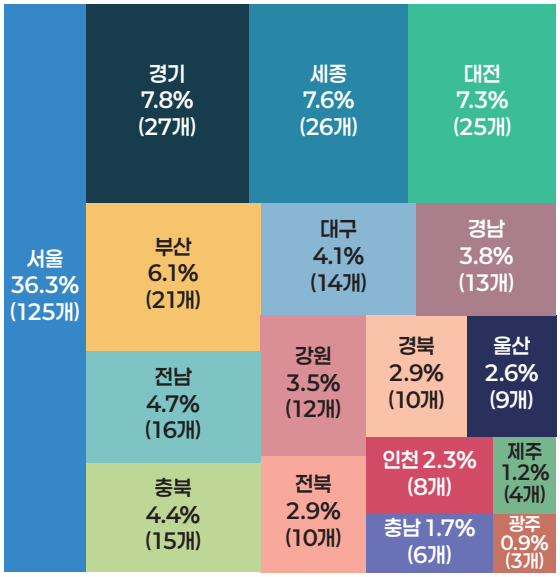
정부에서는 지역 균형 발전을 이유로 공공기관을 전국 각지에 분산 이전해옴. 인천에 소재하다 공공기관 이전 정책에 따라 타지역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은 해양경찰교육원, 경찰인재개발원, 국립해양조사원, 안전보건공단,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이 있음

최근 정부에서 5극 3특 정책을 발표하면서, 인천 소재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그러나, 인천 소재 공공기관 중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 등 기관은 사업장 특성상 인천을 떠날 수 없는 공공기관임

항공안전기술원은 항공기 안전이라는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 우리나라 1, 2위 공항인 인천국제공항, 김포공항 인근에 소재하는 것은 당연함. 또한 드론인증센터, 드론 전용비행시험장 구축 등 UAM 인프라 조성 사업도 인천에서 추진되고 있어 항공안전기술원의 행정 지원이 필수적임

한국환경공단은 인천에서 국립환경과학원, 국립환경인재개발원, 국립생물자원관, 수도권매립지, 환경산업연구단지 등과 함께 환경 관련 연구 네트워크의 중심을 담당하는 상징적 존재임. 한국환경공단이 인천에 소재하게 된 이유 중 하나는 수도권 매립지 운영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인천 시민들의 희생에 대한 보상이었음. 따라서, 한국환경공단의 타지역 이전은 매립지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는 인천을 외면하는 것이며, 환경산업의 중심축을 무너트리는 일임

• 지역별 공공기관 현황 및 비중(2025년) •



자료 : 재정경제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역시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능 인력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으로 기능 인력의 가장 큰 수요처인 인천, 서울, 경기 지역에 있어야 할 것임. 또한, 1968년 설립된 중앙직업훈련원을 모태로 하는 인천에서 출범한 한국폴리텍대학은 산업 근대화를 이끈 산업도시 인천을 상징하는 교육기관으로 학교법인 한국폴리텍의 타지역 이전은 인천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것임

극지연구소도 남극, 북극으로의 잦은 출장, 해외 연구진과의 활발한 교류·협력을 위해서는 인천이 최적지임. 또한, 인천 소재 기업, 대학과의 공동 연구를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인근에 극지환경재현실용화센터가 있어 화학·바이오 산업뿐 아니라 전기·전자·기계 등 산업 분야 연구 지원 인프라도 갖추고 있어 시너지를 내고 있음

제 안

인천은 수도권에 소재한다는 이유만으로 국가 정책에서 소외되어 왔고 공해, 환경오염, 개발 제한 등 피해만 가중. 인천 공공기관의 타지역 이전은 인천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손실로, 인천에도 국가 차원의 배려와 지원이 있어야 하며, 인천 특성에 맞는 공공기관은 인천에 존치해야함

대표과제 3

강화남단 경제자유구역 신규 지정

자료 :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보도자료('25. 12)

• 강화남단 경제자유구역 사업 개요 •

위 치

인천광역시 강화군 길상면·화도면 일원

규 모

6.32㎢(약 190만 평)

사업기간

2025 ~ 2035년

총사업비

약 **3.1**조 원

핵심유치업종

바이오, 피지컬AI, 복합관광

현황 및 문제점

현재 인천시에서는 강화남단 지역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새롭게 지정받아 미래산업 거점으로 조성하고자 함

'25년 12월 인천경제청은 산업통상부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 접수보고하였으며, 2026년 연내 최종 지구지정을 목표로 하고 있음

강화남단 지역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조성하여 인천국제공항과의 연계를 통해 첨단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며, 그린·블루바이오 및 피지컬AI 기반 산업생태계 구축, 스마트 농업 전환, 실증 중심 도시플랫폼 도입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임

인천상공회의소와 인천경제청이 '25년 실시한 기업 수요조사 결과 61.1%의 기업이 해당 지역에 대한 투자 의향이 있다고 응답해, 기업의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강화남단 지역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조성된다면 송도의 바이오, 청라의 로봇·금융, 영종의 항공·물류 기능과 결합하여 인천경제자유구역 산업 생태계의 확장과 산업용지 확충을 통한 기업 투자 활성화, 일자리 창출까지 이어질 것임

제 안

강화남단 경제자유구역 신규 지정

- 강화군은 그동안 수도권 규제, 군사시설보호구역, 농업진흥지역 등 규제가 중첩되며 성장에 제약을 받아옴. 강화남단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고, 강화-영종을 잇는 서해남북평화도로, 계양-강화 고속도로 등 교통 인프라까지 갖춰진다면, 인구감소지역이라는 과제를 해소하고 새로운 첨단산업 거점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④ 글로벌 중심도시 인천 우선실천과제

1 수도권 규제 해소

- 규제자유특구 인천 역차별 해소
- 국내복귀기업 수도권 규제 완화
- 강화·옹진군 평화경제특구 유치
- 강화·옹진 중첩 규제 완화

2 인천 경제자유구역 경쟁력 강화

- 경제자유구역 수도권 역차별 해소
- 국가기반시설(항만, 공항, 경제자유구역) 규제 프리존화
- 경제자유구역 내 국내기업 지원 역차별 해소

3 지방자치 권한 강화

-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 이양(해수청, 중소벤처기업청, 노동청, 환경청 등)
- 인천 소재 국가공기업 경영권 참여 보장 및 지역과 상생 발전
- 중앙집중 권한 및 재원의 과감한 지방 이양
-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공유수면 매립 권한 이관

4 인천 지역 균형발전 및 원도심 재생

- 소규모 공장 밀집지역 정비 및 환경개선
- 지식기반 서비스업 집적을 위한 도심형 미니클러스터 조성
- 군·구별 지역 재생(회생) 과제 수립 및 추진
- 송도 테마파크 부지 개발 정상화를 통한 '인천 관광·레저 랜드마크' 조성
- 국립인천전문과학관 조성

군·구별 현안

강화군·옹진군

- 강화·옹진 중첩 규제 완화
- 강화·옹진군 평화경제특구 유치
- 백령공항 조기 건설
- 영흥 석탄화력발전 무탄소 수소 발전 전환
- 영흥 미래에너지파크 내 첨단산업단지 조성
- 서해남북평화도로 2단계(강화~신도) 조기 착공

중구

- 인천공항 첨단복합항공단지 조기 조성
- 인천발 KTX 조속 개통 및 인천공항 연결
- 제2공항철도 건설
- 공항철도 서울9호선 직결 조속 추진
- 영종-시내 연결 교통망 및 영종 지역 내 교통망 확충
- 영종트램 조속 추진
- 부평연안부두선(트램) 조속 추진

연수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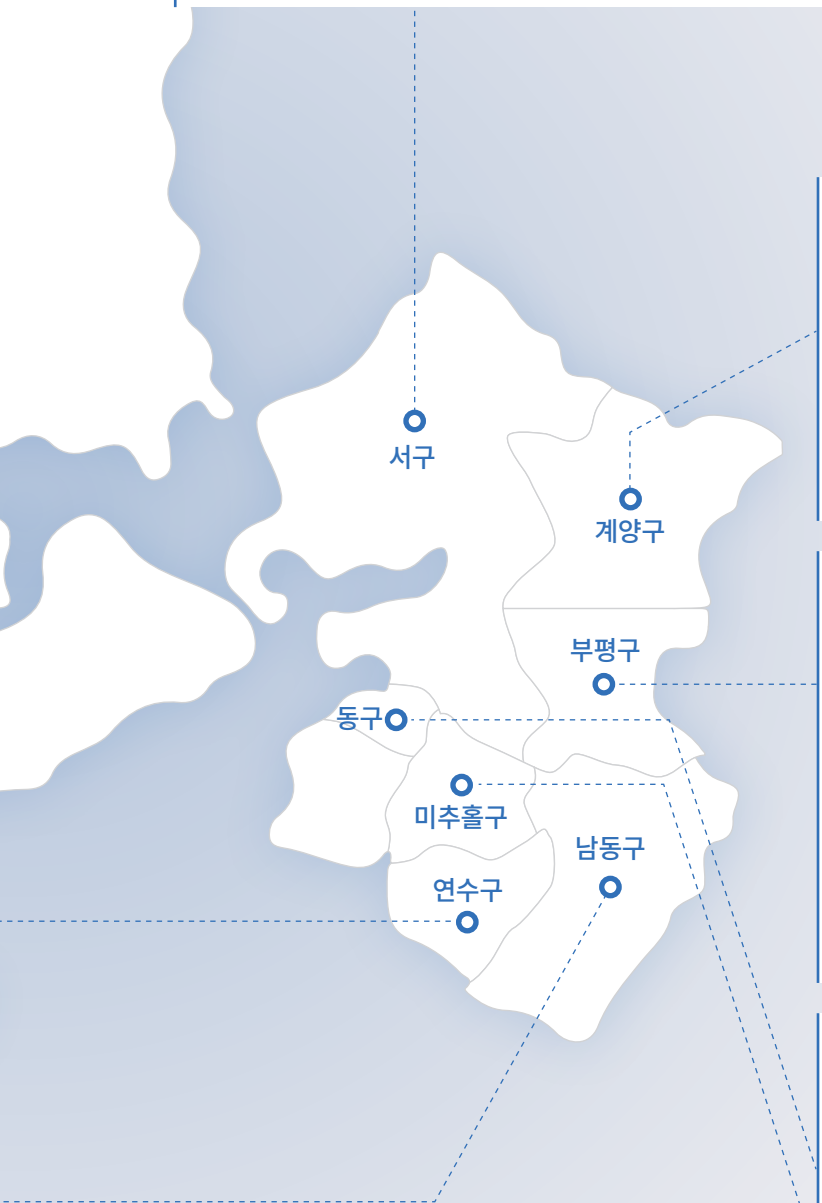
- GTX-B 조기 완공
- 인천지하철 1호선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 연장 추진
- 인천신항 인입선(월곶~인천신항) 추진
- 인천신항 자유무역지역 확대 지정
-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인천~안산 구간 신속 추진
- 송도트램 조속 추진
- 가좌송도선 조속 추진
- 신송도변전소 적기 건립
- 송도 테마파크 부지 개발 정상화를 통한 '인천 관광·레저 랜드마크' 조성

남동구

- 남동국가산업단지 문화선도산단 선정
- 서창~김포 간 고속도로 조속 추진
- 제2경인선 조속 확정 및 추진
- 인천2호선 논현 연장 조속 추진
- 용현서창선 조속 추진

서구

- 인천로봇랜드 피지컬AI 등 로봇산업 핵심 거점으로 육성
- 인천서부일반산업단지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
- 북항 배후부지 입주 업종 확대
- 인천항 계획수심 확보를 위한 제1항로 및 북항 준설
- 인천대로 지하화 조속 추진
- GTX-D·E 조기 착공
- 가좌송도선 조속 추진
- 인천2호선 고양 연장 조속 추진
- 검단 뷰티풀파크 근로자를 위한 교통망 확충
- 서울 5호선 김포·검단 연장 조속 추진
- 인천 강소연구개발특구 조기 조성



계양구

- 계양테크노밸리 2단계 구역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
- 계양테크노밸리 첨단 기업 유치 및 교통인프라 조성
- 대장홍대선 청라·계양 연결
- 계양~강화고속도로 조기 추진

부평구

- 부평·주안 국가산업단지 인공지능 전환(AX) 실증산단 구축사업 선정
- 경인전철 지하화 조속 추진
- 부평연안부두선(트램) 조속 추진
- 인천순환3호선 조속 추진
- GTX-B 조기 완공

동구·미추홀구

- 경인전철 지하화 조속 추진
-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 화물차 공영차고지 조성
- 용현서창선 조속 추진
- 가좌송도선 조속 추진
- 제4경인고속화도로 조속 추진

인천상공회의소

인천경제단체협의회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